

[특별기획] 북한 핵실험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③

우리는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는가?

윤덕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는 날 태평양 상공에 있었다. 핵실험은 핵무기 보유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개적 방법이다.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핵클럽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16년간 북핵문제를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좌절감과 함께 깊은 자괴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을 생각하곤 했었다. 우리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열상에 더 뼈저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핵실험이후 처음으로 글을 쓴다.

90년대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지식인들의 첫 반응은 ‘미국의 군산복합체 음모’였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데 냉전체제로 존재가치가 줄어든 미국방성과 CIA 그리고 군수업자들이 결탁하여 핵능력을 조작 내지는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IAEA의 임시 사찰로 북한의 핵개발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인 것이 드러나자, 우리사회의 논리는 협상용으로 바뀌었다. 체제생존을 위한 협상 지렛대로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즉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북한을 핵무기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여 2차 핵위기가 불거지자, 다시 한번 조작설이 유포되었다. 효선·미선양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이 폭발하는 가운데, 북한이 우라늄농축과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는 조작으로 믿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부시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따른 일북관계개선 움직임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견제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한 때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개진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 진술로 HEU를 통한 핵무기개발이 사실로 드러나고 북한 스스로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조작설은 슬그머니 미국 책임론으로 바뀌게 된다. 부시정부가 양자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한을 압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는지 자성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사회에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에 절망한다. 핵실험의 파장은 남의 탓을 운운할 정도로 한가로운 것이 아니다. 핵실험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것은 미국도 북한도 아니고 바로 우리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핵실험 한방으로 우리경제는 월스트리

트에, 우리의 안전은 펜타곤에 종속될 지경에 처하였다. 물론 같은 민족으로 장군님의 선처에 몸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민족의 자랑거리도 자산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거리요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경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경제에 IMF와 같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남의 탓이나 하고 오락가락할 경우 불안을 느낀 외국자본의 이탈을 초래하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악몽과 같은 IMF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월스트리트가 우리경제에 굳건하게 커미트(commit)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북핵시대의 한국경제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의 세금으로 마련한 우리의 국방력은 핵무기에 무기력하다.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들은 몸을 던져 조국을 구했다. 155마일 전방에서 경계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핵무장한 북한을 무조건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위정자로서 할 짓이 아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핵우산을 강화해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우리 주변정세도 요동을 치고 있다. 철저히 실패한 神政獨裁體制를 핵무기로 유지하려는 북한과 이를 방지할 수 없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반도운명은 우리도 모르게 19세기적 상황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소위 한반도 주변 4강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실험으로 북한문제는 지정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사활적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하였다. 김정일의 바보짓은 한반도와 민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특히 화가 나는 것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군님의 어리석은 짓에 대한민국은 볼모가 되었다.

우리는 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는가? 남의 탓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첫째, 핵무기를 가지려는 북한정권의 의지와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 우리는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다는 북한의 선전에 너무 익숙해 있다. 과연 그럴까? 미국 때문이기에 앞서 한국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의 개입으로 적화를 이루지 못한 한국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미국의 개입을 막기위해 해외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미사일의 꿈을 북한정권에게 갖게 하였다. 50년대부터 원자력을 육성해온 북한의 대야망에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이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남한에 대해 3가지 신화를 갖고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그리고 정통성의 측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 신화들은 차례차례로 깨진다. 우선,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조차 극찬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제3세계

경제발전의 모범사례였던 북한의 주체경제체제는 70년대 중반이후 한국의 신식민지종속경제에 추월당한다. 90년대 들어서는 그 격차가 2-3십배에 달하게 된다. 둘째로 군사적 우위의 신화 또한 붕괴되었다. 인민군은 한국전쟁 당시 단 3일만에 국군을 와해시킨 바 있다. 경제발전에 힘입어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도저히 북한은 재래식 군비측면에서 남한과 군사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총 GNP보다 2배이상 크다고 본다. 끝으로 북한의 정치적 우월성 신화도 80년대 한국의 민주화로 여지없이 붕괴된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사회주의권이 도미노처럼 붕괴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류였던 동맹국들조차 한국의 경제력에 끌려 북한을 버리는 상황에 초래되었다. 90년 9월 한국과의 수교를 통보하러 평양을 방문한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에게 김영남외상(당시)은 한 소수교에는 핵무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만 16년만에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하여 핵무장을 공식화하였다.

남북간의 정치경제군사적 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사회주의권이 연일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이 자신을 버리는 가운데, 북한정권은 핵무장만이 흡수통일을 막고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굳혀갔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지난 20여년간의 핵협상에서도 여실히 들어난다. 국제사회와 북한은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담은 세차레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1985년의 핵확산금지조약, 1992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1994년의 미북제네바합의이다. 각각의 합의에서 북한은 상당한 대가를 쟁겼지만 결국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백만단위의 주민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북한정권은 수억달러의 현금으로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을 사오고 있었다.

역대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의 핵무장에 관한 절박성을 간과했을 뿐만아니라 북한의 핵능력도 애써 폄하하여 왔다. 인류가 60년전에 개발한 기술인 핵무기가 상당한 하이테크 기술인양 핵무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할 것이라고 평가해왔다. 북한은 이미 89년경에 핵폭탄제조에 가장 어려운 난관인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17년이나 지난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여전히 너무 커서 비행기에 실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두 번째 이유와 관련되어있다.

둘째, 역대 우리정부는 북핵문제해결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의지를 애써 저평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국내정치적 고려에서 남북대화를 우선하였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노태우정부이래 어떤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특히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유혹은 북핵문제 해결없이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한다. '조화와 병행'이다. 북핵문제도 남북교류도 병행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화가 깨졌음에도 번번히 남북교류를 포기하지 않았다.

포용정책은 일방적 유화정책은 아니며 「억제(deterrence)와 포용(engagement)」을 병행적으로 추

진하는 이중적 접근에 입각하여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한편,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킨다는 점을 주요 원칙으로 표방하여왔다.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포용정책의 일차적 목표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막상 핵실험이라는 군사적 도발로 튼튼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남북교류를 우선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세 번째 원인이 제기된다.

셋째,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서 우리는 협상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인식이다. 물론 한 때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정치군사문제와 관련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했다. 노태우 정부는 미국에게 '당사자해결원칙'을 관철시켜 북한과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남북간에 핵협상을 했던 전설같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IAEA가 핵무기개발의 핵심부분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북한은 93년 3월 사찰의 근거를 없애기 위해 NPT탈퇴를 선언하였고 이어 남북대화의 틀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핵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조미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 김영삼 신정부(당시)는, 핵문제에 한한다는 전제를 붙이지만 당사자해결원칙을 버리고 전격적으로 미북 직접협상을 수용했고, 한승주 외무장관(당시)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는 강풍이 아닌 햇볕으로 벗길 수 있다는 이숙의 우화를 인용하였다. 이는 햇볕정책의 시초이다. 93년 6월 미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된 이래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북한은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소위 '연미봉남(聯美封南)'의 시대였다. 연미봉남보다 더 큰 문제는 미북직접협상을 계기로 핵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싹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미북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라는 착시현상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 또한 핵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일임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보게 되었다. 북핵문제가 미국의 문제로 정리된 이상, 북핵의 심각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심리상태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미국에 일임하고 제3자적 입장으로 자임한 것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던 가장 핵심적 이유였다고 본다.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미국이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 한미간에는 분명한 온도차의 차이가 있다. 소수의 핵무기라도 우리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반면, 미국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동아시아라는 큰 호수에서 북한은 울챙이이다. 말썽 많은 울챙이 덕택에 큰 물고기들이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다. 머리가 커진 중국도,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일본과 한국도 말썽을 피우는 북한으로 인하여 미국주도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제한적이고 해외로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transfer)하지 않는다면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질서에 있어서의 주도력을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지난 15년간 북한도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협상을 이끌어 왔다. 과거의 협상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북한의 입장이 매우 일관적임을 알 수 있다. 첫째는 협상대상이 한국도 중국도 아니고 오직 미국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타결이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둘째로 일정수준의 핵무장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핵활동은 성역으로 절대 보여주지 않았으며 항상 미래 핵활동의 동결을 협상의 주의제화해왔다. 셋째로 일정한 핵무장을 묵인해준다면,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씨에게 중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중거리가 포함된 것은 아마도 일본을 배려한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테러리스트나 제3국에 절대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transfer)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측 인사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좋은 맹방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결국 일정한 수준의 핵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미국이 묵인해준다면 절대로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북한이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모색하고 있는 북한식 해결의 골자이다.

머리좋은 클린턴 대통령은 거의 북한의 제안을 수용하려 했다. 제네바합의로 북핵활동을 동결하고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으로 미사일협정을 맺으려는 순간 'born again Christian'인 부시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의 꿈은 실현 직전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부시대통령과 네오콘은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중동의 새로운 질서창출에 골몰한다. 9.11테러이후 미국은 완전히 중동에 함몰되고 중국에 북핵문제 해결을 거의 일임한다. 중국은 사실 북핵문제의 주요행위자(major player)가 아니었다. 2차 핵위기가 터지자 북핵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 미국이다. 북한은 지정적으로 중국의 영역이고 핵무장시 미국도 곤란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존재는 중국이라는 인식하에서 부시정부는 북핵문제를 사실상 중국에게 맡겼다. 북한이 재처리를 하여 5-6개 핵무기수를 늘려도, 핵무기보유를 선언해도 부시정부는 중동에 함몰되어 금융조치외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직접대화를 요구하지만 red line을 넘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부시정권을 비난하고 있을 정도다. 부시정권의 입장에서는 수렁화하는 중동의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는 2차적 과제였던 셈이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미국에 맡긴 결과 핵실험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책임인가? 아니면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인가?

‘미국은 전쟁이고 민족은 평화다’라는 허구의 관념에 머무르는 한, 강대국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19세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핵무장은 절대 막겠다는 우리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성이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의지를 의심한다면,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접근을 구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다. 이 두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 무조건 평화적 해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반전과 반핵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반핵을 통해서만 반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